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지정 전 주민설명회 연다

광주 군공항 이전 6자 협의체 실무단, 실행방안 논의 공사기간 단축·예산·이전부지 활용 등 기관별 역할도

광주 군공항 이전 6자 협의체가 군 공항 이전에 필요한 법적 절차 등을 논의했다.

19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 등이 참여한 6자 협의체가 이날 오후

서울에서 대통령실 국토교통비서관 주재로 실무단 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논의는 지난해 12월 17일 옛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국방부·광주시·전남도·무안군 등이 '광주군·민간공항 무안 통합 이전'에 최종 합의

한 이후 처음 열린 실무단 협의다. 재정부는 부처 사정으로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논의에서는 군공항 이전 법적 절차인 국방부의 '예비이전 후보지역 지정'에 앞서 무안 주민 대상으로 공청회 진행 방향 등이 논의됐다.

당초 국방부는 예비이전후보지역을 먼저 지정하고 지역민을 대상으로 공청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무안군의 요청에 따라 주민설명회 등을 우선 진행하기로 의

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날 논의에서는 군공항 이전을 위한 정부부처와 3개 시·군의 역할 등이 협의됐다.

광주시와 국방부는 조속한 군공항 이전을 위해 공사 기간 단축 방안을 모색한다.

광주 군공항이 무안공항으로 이전이 최종 확정될 경우 공사기간만 8년에서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광주시와 국방부는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군공항 이전에 필요한 10조원 규모의 예산은 재정경제부가 마련하고 국토부는 이전지역과 군공항 기존부지 활용 방안 등을 마련한다.

전남도와 무안군은 설명회 자료와 지역 주민 지원방안 등을 준비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 군공항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한 이후 처음으로 3개 정부기관과 3개 지자체의 실무단이

모여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며 "광주 군공항 이전이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지난 2007년 무안 국제공항 개항 이후 본격 논의됐으며 18년 만인 지난해 12월17일 광주시·전남도·무안군·국토교통부·옛 기획재정부·국방부가 통합 이전을 합의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19일 국회 운영위원장에서 회동하기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오른쪽은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왼쪽은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민주, 당무위 의결 1인1표제 내달초 중앙위서 확정

당 대표 예비경선서 권리당원 표심 확대 당규 개정안도 통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인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당헌 개정안이 19일 당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거쳐 다음 달 초 중앙위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무위가 끝나고 이런 내용의 '당헌 개정을 위한 중앙위원회 안건 부의의 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당무위원 79명 중 현장 참석자 16명을

포함해 61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이 가운데 반대표는 2명에 그쳤다.

1인1표제는 당 대표·최고위원 선거 시 적용하던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가치를 현행 '20대1 미만'에서 '1대1'로 수정하는 안이다. 정청래 대표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내걸었던 최우선 공약 중 하나다.

지난달 초 도입을 추진했으나 중앙위 투표 부결로 좌초된 바 있다.

이날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정청래 현 당 대표 연임을 위한 포석이라는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과,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어서 안 된다는 주장이 맞서면서 설전을 벌였으나 당무위 의결로 일단락됐다.

개정안은 오는 22~24일 권리당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를 거친다.

이어 다음 달 2일 열리는 중앙위에서 1인1표제 안건을 2월 2일 오전 10시부터 3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투표에 부쳐 최종 의결을 시도한다.

이날 당무위에서는 이 밖에도 △제5차 중앙위 소집의 건 △'대의원 실질적 권한 및 역할 재정립', '광역·기초 비례대표 선출 방식 변경' 등과 관련한 당규 개정의

건 △제9회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피선거권 기준 일부 예외 적용 권한 위임의 건 등 안건이 의결됐다.

또 당 대표 선출을 위해 예비경선을 할 경우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 비율을 대폭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당규 개정안도 이날 당무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중앙위원급 투표 반영 비율은 35%로 15%포인트(p) 줄어들었고, 권리당원과 국민 여론조사 투표 반영 비율은 35%와 30%로 각각 10%p, 5%p씩 늘어났다. 이 당규 개정안은 최고위원회와 당무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성호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제주항공, ‘양쪽 엔진 고장’ 훈련 없어”

김문수 “대형 사고로 이어진 매뉴얼…시스템 실패”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사진)이 19일 제주항공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2024년 비상절차 항목 정기훈련 반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주항공 2216편의 조종사들은 최근 3년간 '양쪽 엔진 고장' 상황에 대한 훈련을 단 한 차례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항공철도사고조사분석위원회의 12·29 여객기 참사 조사에 따르면, 제주항공 2216편은 사고 당시 양쪽 엔진이 모두 손상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황에 대한 사전 훈련은 전무했던 것이다.

제주항공은 자체 비상절차 정기훈련을 운영하고 있으나, 양쪽 엔진 고장은 사고 확률이 낮고 법정 필수 훈련 항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해 왔다. 그러나 국제 기준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국제 사회는 이미 규정기반 훈련에서 증거 기반 훈련(EBT)으로 전환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실제 사고 사례 데이터를 토대로 치명적이지만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정기훈련에 포함하도록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2009년 '허드슨강의 기적' 이



후, 미국의 메이저 항공사들은 양쪽 엔진 실패와 같은 시나리오를 2~3년 주기 순환 훈련의 필수 항목으로

편성하고 있다. ICAO 또한 관련 매뉴얼을 통해 양쪽 엔진 추력 상실 훈련의 정기적 반영을 권고해 왔다.

훈련 매뉴얼 인가 과정 역시 정점이다.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에 따르면, 운항증명소지자(제주항공)는 훈련 매뉴얼 운영을 위해 항공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즉, 국토교통부는 치명적 사고 시나리오가 빠진 매뉴얼을 인가에 준셈이다.

김문수 의원은 “조종사들은 극한 상황에서 추락을 막기 위해 신의 경지에 가까운 동체 착륙을 감행했지만, 훈련 매뉴얼과 제도의 후진성으로 인해 더 안전한 대응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조위 조사에서 항공사의 훈련 실적과 제도적 결함이 충분히 드러나지 못한 만큼, 추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성호 기자 solee235@gwangnam.co.kr

도, 학생 성장·식생활 지원에 1633억 투입

학교급식·유전자 변형 없는 식품 식재료 품목 확대

전남도는 지역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균형 잡힌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올해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1633억원을 투입했다.

사업별로 무상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전남도 496억원, 전남도교육청 745억원을 포함한 총 1241억원을, 친환경농산물과 유전자 변형 없는 식품(Non-GMO) 식재료 차액 지원사업에 전남도가 392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와 특수·인간대안학교 등 총 2193개교에 재학 중인 학생 21만1545명으로,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간장, 두부, 육수수준 등

14개 품목으로 한정됐던 기존 유전자 변형 없는 식품 식재료 지원품목 외에도 추가로 학교에서 자유롭게 구매하도록 개선했다.

또 학교급식 식재료의 발주, 공급, 정산까지 모든 과정을 전산화하는 공공급식통합플랫폼(SeaT) 시스템을 8개 시·군에서 시범 운영하고, 22개 시·군으로 전면 도입해 2월부터 확대 운영한다.

한편 전남도와 전남교육청은 지난해 공동 T/F 등 운영을 통해 무상급식 식재료 분담비율을 지방정부 40%, 교육청 60%로 확정하고 3년간 적용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중장기 재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급식 정책의 연속성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박정철 기자 holbul@



전남도는 지역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균형 잡힌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1633억원을 투입한다. 사진은 공공급식통합플랫폼 시스템 교육하는 모습.

광주송정역, ‘포용 디자인’ 공간 재탄생

테마공간 조성…광주시·광주비엔날레 등 동참

호남의 대표 문화인 광주송정역이 상생과 연대의 '광주정신'을 계승한 포용 디자인 공간으로 재탄생해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교통공사는 19일 광산구 광주송정역에서 '포용 디자인(Inclusive Design)'을 적용한 광주송정역 테마 공간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김영순(사) 광주장애인총연합회 이사장, 윤범모(재)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와 인근 지역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에서는 광주의 도시 정체성인 '무등 정신'과 2025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주제인 '포용'의 개념을 광주송정역 역사 공간 전반에 담아냈다.

특히 장애인과 노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직관적이고 효율적으로 도시철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범용성 높은 디자인을 구현해 냈다.

광주송정역은 도시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공간인 만큼 출입구의 시인성 높은 그래픽을 시작으로 대합실 내 직관적인 표지판, 낮낮이형 안내 창구 등 이용객을 배려한 요소를 역시에 끌고구 구현함으로써 방문객의 디자인 수용성과 이용 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사 문석환 사장은 “광주의 대중정신을 반영한 이번 테마 공간 조성이 지역 발전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주의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앞장서는 모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지난해 2월 광주시·광주신세계와 협업해 농성역에 현대적인 세련미와 알찬 콘텐츠가 넘치는 시민 소모 공간

을 조성하는 등 교통 서비스 제공을 넘어 지역민 생활 편의 극대화에도 적극 나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송승중 이사장, 광주 북구청장 출마 선언

“정직한 행정·사람 중심 복구…민생 회복 이끌 것”

송승중 광주북구민생경제연구소 이사장(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사진)은 오는 20일 광주시의회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북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송승중 이사장은 출마 선언을 통해 “북구는 광주의 역사와 민주정신이 가장 두텁게 축적된 공동체이지만 정체된 지역경제와 생활행정 불편, 인구 감소라는 현실 앞에 서 있다”며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행으로 변화를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고 출마 배경을 밝혔다.

특히 송 이사장은 30여년간 지방행정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은 책상 위가 아니라 현장에서 완성된다”며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 시작한 일은 끝까지 책임지는 구청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송 이사장은 △민생경제 회복 △생활이 편한한 복구 △미래를 준비하는 복구를 핵심 과제로 제시할 예정이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 주차·교통·안전 등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 중심 행정, AI 기반 행정 도입과 미래전략산업 유치



를 통해 청년이 떠나지 않는 복구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또 ‘사람이 희망이다’를 기조로 한 주민 참여형 ‘좋은세상 만들기’ 캠페인, 5·18 국립묘지를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체험 공간 조성, 북구만의 정체성을 살린 지속 가능한 지역 축제 육성 등도 주요 비전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송 이사장은 “구청장은 관리자가 아니라 책임자”라며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현장에 가고, 주민의 삶으로 평가받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직한 행정이 신뢰를 만들고, 신뢰가 공동체를 다시 움직이게 한다”며 “정직한 행정, 따뜻한 복구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 이사장은 기자회견 이후 언론 질의응답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 방안, 청년 인구 유출 대응,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복지 정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